

“살인기업 SK케미칼·애경·이마트,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 기만 직접 알리기 위해 나왔다”
홍대입구역 등 서울 도심서 행진 시위… “가해기업 배·보상하라”
매주 주말마다 규탄 기자회견하기로… “사과할 때까지 항의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10년여 전 참사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가해기업들은 피해보상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21일 관련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본사까지 행진했다.

추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기업들의 사과와 배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지난달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4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가해기업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문을 사법부가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사법부와 결탁해 탈출구를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억울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다시 보여줬다”며 “사법부는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인맥 좋은 소수 기업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안전하다고 표시하고 판매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스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스티아졸리논(MIT)을 생산·판매한 SK케미칼의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다”며 “제품만 받아 판매한 죄밖에 없다는 식의 이마트와 애경산업 등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기업들이 진정한 책임인정과 사과, 배보상을 하는 날까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항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설 연휴를 앞두고도 서울 용산역 이마트와 홍대입구역 앞 애경 본사, 종각역 SK서린빌딩을 차례로 방문하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향해 피해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장소에서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은 1심 재판 내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해왔음에도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며 “사법부가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돈 많고 인맥 좋은 재벌기업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한 애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황정기 기자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기업들의 기만을 직접 알리기 위해 가해기업들 앞에 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SK케미칼은 2002~2011년 사망자 12명을 초래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메이트’는 욕실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회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대한 부상 등 피해 신고자만 800명이 넘는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

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가족을 잃었고 천식, 폐질환 등 질병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 모씨, 왕 모씨, 최 모씨 등은 부인을 잃고 스스로는 폐질환을 앓게 됐다. 송 모씨는 부인과 장모를 잃었고 간질성 폐질환을 앓는다. 이 모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나 같이 “가해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온 배경이다. 피해자들은 매주 주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에 회사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지만 별다른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다. 강주현 기자

농식품부, IFAD 총회 참석... 전세계 농촌 극빈층 지원

IFAD, 내년~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 15.5억달러 확정
한국, 내년~2023년 아시아 등 지역 집행이사국에 피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IFAD 총회에 참석해 농촌 극빈층 복원력 강화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17~18일 열린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농촌 개발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IFAD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금융

기구다.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을 목표로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IFA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12차(내년~2024년) 기금 조성 목표액을 전기(2019년~올해) 대비 40.5% 증가한 15억5000만 달러로 확정



농식품부가 IFAD 총회 참석해 농촌 극빈층 복원력 강화를 논의했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스카이데일리 DB

했다. IFAD는 177개 회원국들로부터 기여금

을 받아 3년 단위로 국제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해 개도국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장기 저리로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제11차 기금조성 당시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개도국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내년~2023년 아시아 등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도 선출됐다. 그밖에 IFAD 총재로는 토고 출신 길버트 호옹보 현 총재가 투표 없이 임기 4년의 총재로 재선출됐다.

허정진 기자

LG유플러스, 장애인 전용 '5G 복지요금제' 출시

“통화 제공량 확대, 요금제를 보다 실속 있게 활용 기대”

5G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가 출시된다.

LG유플러스는 21일 장애인들을 위한 5G 복지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5G 요금 시장에서 장애인 전용 서비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영상·부가 통화 제공량을 대폭 늘린 ‘5G 복지 55’, ‘5G 복지 75’를 신선했다. 청각 장애인들이 수화로 의사소통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화면으로라도 상대방을 만나볼 수 있도록 영상·부가 통화를 월 600분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는 5G 최고가 요금제인 ‘5G 시그니처(월 13만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제공량이다.

5G 복지요금제는 기본적인 모바일 데이터 구성도 포함한다. ‘5G 복지 55’는 월 5만5000원(VAT포함)에 12GB(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의 5G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5G 복지 75’는 월 7만5000원(VAT포함)에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 제한)로 구성돼 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쓸 수 있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요금기획담당



스카이데일리 DB LG유플러스는 21일 장애인들을 위한 5G 복지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은 “지난해 가입자가 1200만에 달하는 등 5G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요금제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확대된 전용 통화 제공량으로 장애인들이 요금제를 보다 실속 있게 활용하고, 나아가 5G 서비스 단말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요금제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통신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가족결합 할인에 복지 할인까지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정현 기자

설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 적발

위반품목, 돼지고기·쇠고기·두부부류... 벌금형·과태료



지난 설 명절 기간을 틈타 제수용품·선물세트 원산지 표시를 속인 식품 업체 400여 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9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 등 총 443곳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88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의 순이었다.

위반 업체는 음식점이 146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 27건(6.1%) 등의 순이었다.

허정진 기자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 133만명... 여성이 9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 제공

지난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90%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국민

39.1명 중 1명이 해당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의 적정 사용을 돕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제공하고 기준 준수사 요구된

다면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처방의 사 본인에게 제공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적정 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

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소급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 제공한다.

허정진 기자

